



수능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4일 전라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북지역 7개 군 신청 완료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20일 대상지 발표... 선정시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전체가 신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약 6곳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7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 제도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각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파급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로 역내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촌 읍면 단위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8,500억원 규모다.

도는 최대한 많은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안전 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구급차 3대와 구급대원 18명을 투입해 응급의료 안전 지원에 나선다.

구급차를 차량별 3명, 1일 9명 근무 체계로 편성해 2교대 방식으로 운영하며, 특수구급차 등을 포함한 구급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이만호 기자

국산 콩 생산량 늘었지만 소비량은 '뚝'

생산량 2021년 11만톤에서 작년 15만5000톤으로 1.4배 ↑
소비 비중 2023년 34.3%서 2024년 30.5%로 3.8%p 감소민주 이원택 의원, "정부·aT, 수입산 콩 낮은 가격에 방출
국내 시장가격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산 콩 경쟁력 약화 초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4일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정부의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톤에서 지난해 15만5,000톤으로 1.4배 증가했음에도, 국산 콩 소비 비중은 2023년 34.3%에서 2024년 30.5%로 3.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소비 인식 제고 사업만 추진했을 뿐, 원료 구매와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 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년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



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7,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T가 수입·비축한 콩의 판매 원가는 각각 kg당 1,336원(2022년), 1,475원(2023년)이었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각각 1,140원과 1,400원 수준의 저가로 책정돼 판매됐다.

결국 정부와 aT가 수입산 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 국내 시장가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산 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농청은 벼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의 핵심 품목으로 꼽히며,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서도 논콩은 8만ha 조정 목표 중 1만4,000ha

를 전환, 전체의 30.5%를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 기준 전체 논콩 재배면적 2만4,300ha(직불금 수령 기준) 중 9,800ha(40%)는 이모작 형태로 재배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품목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2026년 전략작물 계획면적에 따르면, 논콩은 2025년 2만8,000ha에서 2026년 2만ha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수출매출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구매 약속을 믿고 생산량을 늘린 농가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2024년 기준 콩 재배면적은 2만ha까지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만큼, 면적 축소는 지역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콩 구매물량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에 있다"면서, "생산면적과 구매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년 수준의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약속대로 구매물량 전량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희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80% "재가동 되면 다시 들어가겠다"

중기 45.5% "남북경협,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새 생산기지 확보 등 기대감 커

국내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남북경제협력에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0%는 "재가동 시 재입주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이 다시 열릴 경우, 새로운 생산기지 확보와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이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200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0.0%는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전체 제조 중

소기업의 인식도 눈길을 끈다. 전체 응답 기업의 45.5%가 남북경협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한의 투자환경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본 기업도 36.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 남북경협 재개의 실질적 수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시기, 입주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생산 안정성 확보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오상근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군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부안군의의회는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더 나은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부안군의의회

